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
하위법령 제정안 연구**

2012. 2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 하위법령 제정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2월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장재옥(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연구원 : 성낙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경원(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기연(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 연구보조원 : 변용완(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 제2절 연구의 방법 과 범위 | 2 |
|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수정안) 하위법령 | 3 |
| 제1절 총칙 | 3 |
| I.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 규정(법률안 제2조) | 3 |
|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 8 |
| I.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법률안 제6조) | 8 |
| II. 지원센터(법률안 제17조) | 11 |
| III. 실태조사(법률안 제18조) | 14 |
| IV.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법률안 제26조) | 17 |
| V.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법률안 제29조) | 27 |
| VI. 영업의 승계 (법률안 제30조) | 38 |
| VII.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법률안 제31조) | 40 |
| VIII. 영업정지 (법률안 제32조) | 44 |
| 제3절 보칙 | 48 |
| I. 수수료 (법률안 제35조) | 48 |
| II. 권한의 위임·위탁 (법률안 제36조) | 51 |
| 제4절 벌칙 | 55 |
| I. 과태료 (법률안 제39조) | 55 |
| 제3장 결론(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 하위법령(안)) | 73 |
| 제1절 법령 3단 비교표 | 73 |
| 제2절 제언 | 93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의 도입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의 정착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이 제안되었음
- 동 법률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무 및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방식,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및 관련 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등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법률안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함
- 대중문화예술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대중문화예술 종사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안을 제시함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범위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치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검토 및 방안 마련
 - 대중문화예술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식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조직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마련
 - 대중문화예술산업분야의 자체 질서 확립 역량이 증대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진

입장벽 완화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령의 필요한 사항 등을 도출함

제2절 연구의 방법 과 범위

-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및 청소년연예인 보호 측면에서,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성년 연예인의 근로시간 과다 및 학습권 침해의 인권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또는 방송사(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 및 불공정한 영업질서 등을 검토하여 그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마련
- 대중문화예술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및 사회부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 및 세부적인 제재절차와 그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청의 재량의 범주에서 다른 관련 법령의 예를 참조하여 적정한 선에서 재량준칙으로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이하 관련 법령에서 그 초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수정안) 하위법령

제1절 총칙

1.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 규정(법률안 제2조)

1. 법률(안)의 관련조문

1) 조문

제2조(정의)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광고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의 기획·제작·관리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5.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타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계획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말한다.

2) 조문의 취지 및 배경

- 본 규정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제정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본 규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기획·제작·관리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시행령(안)에서 규정할 사항

- 동 법률(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범위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규정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구체적인 유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3. 시행령(안) 및 해설

1) 시행령(안)

제00조(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 지원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2호에 따른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음악산업 중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과 관련된 산업
3.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영상물 관련 산업. 다만, 교양·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4.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물과 관련된 산업. 다만, 순수예술 공연·고전 음악·고전 무용·국악·곡예는 제외한다.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와 관련된 산업

2) 조항의 성격

- 동 시행령(안)은 법률(안) 제2조 1호에서 위임된 사항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유형을 구체화 시키는 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3) 관련 입법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营业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营业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4) 해설

- 본 규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범위를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광고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장르까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동 시행령(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개념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1.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법률안 제6조)

1. 법률(안)의 관련조문

1) 조문

제6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기간·보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7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조문의 취지 및 배경

- 본 규정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해당 예술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계약 당사자 간의 실질적 평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있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계약기간 및 보수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규정임
- 법률제정안에 따르면 계약서의 명시와 교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9조 제2항 제1호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으로써, 본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2. 시행령(안)에서 규정할 사항

- 계약의 내용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및 보수 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3. 시행령(안) 및 해설

1) 시행령(안)

제00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의 내용)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수의 지급시기·방법 및 금액
2.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
4.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2) 조항의 성격

- 동 시행령(안)은 법률(안)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계약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조항으로서,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근거 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3) 관련 입법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①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3.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7. 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8.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0.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4) 해설

-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규정(법률안 제39조 제2항 제1호)을 마련하고 있음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도모하는데 본 조항의 취지가 있음
-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차후 계약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로 보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경우에는 사적 자치에 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자율에 맡겨야 할 것임
- 하지만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있어 충돌을 방지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II. 지원센터(법률안 제17조)

1. 법률(안)의 관련조문

1) 조문

제17조(지원센터)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2.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3.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4.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업무의 홍보 등 기타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의 취지 및 배경

- 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현행 한국콘텐츠진흥원내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 법률자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중문화 지원센터¹⁾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나 조직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그 필요성 내지 입법적 의의가 있음

2. 시행령(안)에서 규정할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의 불공정한 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안에 따라 자율 조정 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3. 시행령(안) 및 해설

1)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가) 시행령(안)

제00조(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지원센터에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실, 교육실, 홍보실 등을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의 상담,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불공정거래 및 성폭력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리 및 보급
3. 대중문화예술인의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1) <http://www.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kr/intro/intro.jsp>(2012년 2월 방문).

나) 조항의 성격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업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관련입법례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라) 해설

동 시행령(안)은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업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업무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2) 지원센터내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시행령(안)

제00조(지원센터내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

원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나) 조항의 성격

지원센터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관련입법례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라) 해설

동 시행령(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자문위원회로 구성하고, 정책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전문성을 세우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내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음

III. 실태조사(법률안 제18조)

1. 법률(안)의 관련조문

1) 조문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조성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의 취지 및 배경

- 기획사의 연습생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사기 행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은 매우 허약한 실정이고, 현재 연예기획사는 약 500여 개이나, 실제로는 1,000여 개 정도의 기획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상 가수와 연기자 등 연예인을 발굴, 육성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산업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조성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실태 및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이해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지망생이 각종 캐스팅을 통해 데뷔 준비를 하고자 할 때, 해당 기획사와 매니저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기획사 정보 DB 및 매니저 확인시스템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시행령(안)에서 규정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3. 시행령(안) 및 해설

1) 대중문화예술산업 등의 실태조사

가) 시행령(안)

제00조(대중문화예술산업 등의 실태조사)

- ①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또는 지원센터장)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 업종 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의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장이 정한다.

나) 조항의 성격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업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관련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분야별로 게임산업의 현황 및 게임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6]

라) 해설

동 시행령(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종사자의 불공정한 부분 및 관련 종사자의 불이익한 상황 등을 파악하여,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의 불공정거래, 폭력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IV.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법률안 제26조)

1. 법률(안)의 관련조문

1) 조문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의 취지 및 배경

- 오늘날 가수 연예인 등 한류스타를 배출해 내는 일명 “연예기획사”로 불리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법제도상의 규정이 미비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인력배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종으로 「직업안정법」의 규율대상인 “유료직업소개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이 있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특성과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적지위 등을 고려할 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이와 달리 특별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유료직업소개업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영업인데 반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알선하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자 간의 연예용역공급계약은 노동관계법상 “고용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근로자공급사업도 ‘근로자공급계약에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나, 대중

문화예술인의 특성상 그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의 유사업종 현황 >

| 구 분 | 주요 기능 |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의 차이 |
|-------------|---|--|
| 유료직업소개업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고용계약 성립 알선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알선하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제작자간 계약의 성질이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음 |
| 근로자 공급사업 |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 |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적지위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

- 법률 제정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고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이후 일정한 문제를 발생 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영업질서를 확립하여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 법적으로 공인된 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함에 따라, 연예산업의 신뢰성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사업자의 문제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업계 스스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신고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실태파악과 정책수요 조사의 내실화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지원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

2. 대통령령(안)에서 규정할 사항

① 인적요건 관련 내용의 하위법령 위임

- 법률 수정안에서 신고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향후 대중문화예술산업분야의 자체 질서 확립 역량이 증대되어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수정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요건을 폐지한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법률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구체적 종류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한 필요 서류 등이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위임된 사항

가) 신고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신청서

기본적으로 법률안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그 신고(변경신고)신청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

- 법률안 제26조의 구비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사업자 신고증 사본, 더불어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함
- 따라서 신고신청서 이외에 법률에서 규정된 서류 및 신고증 발급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서류확인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변경신고의 경우 그 구비서류와 신청절차가 다른 만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률안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 신고증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에 관한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대통령령(안) 및 해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 등

가) 대통령령 및 부령 (안)

[대통령령안]

제00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 등)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신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부령안]

제00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신청서 등) 시행령 제00조제2항에 따른 신고신청서 및 변경신고신청서는 별지 제00호 및 제00호서식으로 한다.

나) 조항의 성격

◦ 위 시행령안 제00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 등)은 법률안 제26조의 집행 및 명시적 위임에 따라 기본적인 신고서류의 제출과 담당 공무원의 확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서류제출 및 확인 등

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다) 관련 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7.5.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개정 2007.5.18>)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7.5.1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라) 해설

◦ 법률안 제26조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신고의 절차와 방법, 신고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우선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확정하여야 함

- 우선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법률안 제26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신청서 이외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을 제출토록 규정함

- 이는 실제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수행을 위해 영업소가 실재해야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영업소의 소재지 정보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에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삽입한 것임

◦ 또한 비록 법률안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로서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2) 변경신고의 절차 등

가) 대통령령(안)

제00조 (변경신고의 절차 등)

① 제0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제00조 (신고증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00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00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0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항의 성격

- 법률안 제26조에서 신고절차와 별도로 변경신고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서, 주요사항의 변경내용이 무엇인지가 적시될 필요가 있음
- 이는 신고서류의 제출과 마찬가지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한 집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다) 관련 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허가증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②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라) 해설

- 일단 위 시행령안 제00조에 따른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률안 제26조에서 변경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변경사항에 맞는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규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우선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명시함
- 변경신고는 이미 신고를 마친 사업자이므로,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기존의 신고증 이외에, 기본적인 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법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탄력적인 변경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판단여지를 남겨둠
- 또한 신고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정부법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
 - 신고증의 발급절차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 모두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행정청에게 신고증발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증의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 대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한 신청서 양식은 별표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함

V.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법률안 제29조)

1. 법률(안)의 관련조문

1) 조문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의 취지 및 배경

-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과 능력 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본 법률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산업과 관련된 제반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업무와 관련한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
- 다만, 제정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신고제로 규정하면서 신고를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의 미참가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완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 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시행령(안) 및 부령(안)에서 규정할 사항

1) 시행령(안)

- 법률제정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으로 본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안)에서는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와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공시 방법 등을 시행령(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부령(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의 기간 및 횟수, 교육내용에 대한 통지, 교육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에 관하여 부령(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시행령(안) 및 해설

1) 시행령(안)

제00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내용)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책을 위한 기본 방향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인력의 전문성
 3.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현황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성 판단 자료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0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또는 영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항의 성격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내용

- 법률제정안에서 위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의 기본 방침과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음

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비롯하여 지정 및 변경 신청을 위한 절차 및 요건 그리고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시행령(안)에서 구체화하고 있음

3) 관련 입법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2. 교육시설 현황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⑥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해설

◦ 시행령(안)에서는 법률제정안에서 위임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교육 내용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서류 및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부령(안) 및 해설

1) 부령(안)

제00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시간 및 지원 등)

-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은 매년 00회로 하며, 연 00시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0000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제00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영 제00조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조항의 성격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시행령(안)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기간 및 횟수, 교육내용의 통지, 대리 참여 여부,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 등이 여기에 해당함

3) 관련 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해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를 부령(안)에서 정하면서,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7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업장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대리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지원 항목에는 강사료와 수당 및 교재 비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 교육기관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시킬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로 정하고 있음

<별지 및 별표>

[별지 제0호 서식]

| | |
|----------|---|
| 지정번호 : 제 | 호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1. 교육기관의 명 칭 :
2. 교육기관의 대표자 :
3. 교육기관의 소재지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00조 제0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앞 쪽)

210mm×297mm ,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표 0]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시행규칙 제0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 1차 | 2차 | 3차 |
| 가. 시행령 제00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 시행령 제00조 제0항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 시행령 제00조 제0항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VI. 영업의 승계 (법률안 제30조)

1. 법률(안)의 관련조문

1) 조문

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营业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2) 조문의 취지 및 배경

- 법률안 제30조는 이미 신고를 마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 등으로 그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해당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등록과는 달리 단순히 신고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부령(안)에서 규정할 사항

- 법률안 제30조에서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은 없으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업승계인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양도와 상속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등에 관한 내용을 부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3. 부령(안) 및 해설

가) 부령(안) : 영업승계 신고 절차

제00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조항의 성격

◦ 동 시행규칙안은 법률안 제30조에서 위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고절차를 위해 필요한 집행규정으로 신고절차가 원활하고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다) 관련 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12.4>

1.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 <2009.12.4>

라) 해설

◦ 동시행규칙안에서는 법률안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0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로서 각 해당 사유에 맞도록,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신고증 및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함

◦ 이는 다른 참고법령에서도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를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서 기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부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

VII.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법률안 제31조)

1. 법률(안)의 관련조문

1) 조문

제31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영업의 재개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2) 조문의 취지 및 배경

- 법률(안) 제31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 등의 수행 과정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신고로 인한 업계의 행정정보 파악을 위한 목적과 마찬가지로, 신고 후 사업자들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업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2. 대통령령(안)에서 규정할 사항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의 휴업·폐업, 영업재개 등의 신고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사실확인 및 직권말소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3. 대통령령(안) 및 해설

1)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절차

가) 대통령령(안)

제00조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절차)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항의 성격

- 동 시행규칙안은 법률(안) 제31조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인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위한 절차에 관한 조항으로서, 해당 업계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다) 관련 입법례

게임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22조 (폐업신고 절차)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라) 해설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려는 경우를 상정하여 별지 제00호 서식을 마련하고, 해당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에 기존의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령에서와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는 것으로 규정함

2) 직권말소 등

가) 대통령령(안)

제00조 (직권말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나) 조항의 성격

◦ 동 시행규칙안은 법률안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폐업을 하고도 신고되어 있는 사업자 현황을 정리하기 위해 사실 확인 및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성격을 가짐
- 이는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경영상황의 악화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잠적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신고업체로 남게 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고, 일반 공중이해당 업체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폐업할 경우, 사업자에게 행정관청에 협력할 의무를 지우는 근거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다) 관련 입법례

게임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라) 해설

◦ 관할 행정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해당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관할 세무서 등에 폐업신고를 통해 영업의 실제 폐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미리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하여 해당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함

VIII. 영업정지 (법률안 제32조)

1. 법률(안)의 관련조문

1) 조문

제32조(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4호에 대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의 취지 및 배경

◦ 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고용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관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규정임

2. 대통령령(안)에서 규정할 사항

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정지 사유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를 영업정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의 행정적 제재의 기준이 필요함

- 또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위반 정도의 경중에 따라 다시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영업정지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 법률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3. 대통령령(안) 및 해설

1) 행정처분의 기준 등

가) 대통령령(안)

제00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00와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00호 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조항의 성격

- 위 시행규칙안은 제재처분에 관한 구체적 기준으로서 행정처분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인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다) 관련 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라) 행정처분의 기준(별표) 제시

[별표 00]

행정처분의 기준(대통령령 제0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라.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다.

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영업정지 6개월 | | | |
| 나. 고의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다.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사실을 알면서 고용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 | | | |
|-----------------------------|-----------------|------------|------------|------------|------------|
| 라.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4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4월 | 영업정지 6월 |
| 마.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4월 | 영업정지 6월 |

- 법률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행정제재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셈이 되는 데 이에 관한 영업정지기간의 해석이 기존 영업정지 기간에 새로운 영업정지 기간을 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기존 영업정지 처분은 소멸되고 새로운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재제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자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고의 고찰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법률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영업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안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의 유형]

| 구 분 | 입법례 |
|---------------------|---|
| 등록·허가 취소 | 가축분뇨관리업, 소독업, 건설폐기물처리업, 경비업, 골재채취업, 담배판매업, 문화재매매업, 문화재수리업 등 |
| 폐쇄조치 실시 및 위반시 형벌 부과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결혼중개업, 공연장영업, 유원시설업, 직업소개업 등 |

제3절 보칙

1. 수수료 (법률안 제35조)

1. 법률(안)의 관련조문

1) 조문

제35조(수수료)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의 취지 및 배경

- 법률안 제35조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일반적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임

2. 부령(안)에서 규정할 사항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시 징수되는 수수료 금액이 부령에서 규정되어야 함

3. 부령(안) 및 해설

1) 수수료

가) 부령(안)

제00조 (수수료)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00와 같다.

나) 조항의 성격

- 위 시행규칙안은 법률안 제35조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기본적인 신고절차시 소요되는

행정경비로서 수수료징수의 근거규정이 됨

다) 관련 입법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업 등록등에 관한 수수료징수 조례 제2조(수수료 부과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개정 2009.11.16>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개정 2009.11.16>

게임산업진흥법 제4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라) 해설

◦ 참고가 될 수 있는 다른 법령에서의 수수료부과기준에서 살펴 볼 때(광주광역시 체육시설업 등록등에 관한 수수료징수 조례 제2조, 또는 게임산업진흥법 제41조(수수료) 관련), 보통의 경우 신고신청의 경우 5만원,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사안에 따라, 3만원 혹은 2만원의 징수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통상의 징수료의 하한으로서, 가장 적은 금액인 5만원(신고), 2만원(변경신고)으로 책정함

<참고: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업 등록등에 관한 수수료징수 조례>

| 구 분 | 단 위 | 금 액(원) |
|-----------------|-----|---------|
| 1.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 | |
| 가.사업계획승인 신청 | 건 | 100,000 |
| 나.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 | 30,000 |
| 다.등록 신청 | " | 50,000 |
| 라.변경등록 신청 | " | 30,000 |
| 2.기타 등록체육시설업 | | |
| 가.사업계획승인 신청 | " | 50,000 |
| 나.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 | 20,000 |
| 다.신고 신청 | " | 30,000 |
| 라.변경신고 신청 | " | 20,000 |
| 3.신고체육시설업 | | |
|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 " | 10,000 |

[수 수 료(시행규칙 제00조 관련)]

| 구분 | 금액(원) |
|------|--------|
| 신고 | 50,000 |
| 변경신고 | 20,000 |

II. 권한의 위임·위탁 (법률안 제36조)

1. 법률(안)의 관련조문

1) 조문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의 취지 및 배경

◦ 법률안 제4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기관 등에 권한의 위임, 위탁을 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규정임

2. 대통령령(안)에서 규정할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규정될 수 있음

3. 대통령령(안) 및 해설

1) 권한의 위임·위탁

가) 대통령령(안)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00조제00항에 따른 000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00조의 교육실시업무를 영 제00조에서 정한 전문기관 또는 협회·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조항의 성격

- 행정권한의 일반적 위임의 근거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라) 해설

◦ 동 대통령령(안)은 법률안 제36조에서 권한의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으로 볼 수 없고, 필요시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법률제정의 초기단계에서 구체적인 권한들을 위임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법시행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분야의 산업발달 상황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판단 하에 점진적으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시행령에서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가) 시행령(안)

제00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00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0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협회·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해설

◦ 행정권한의 위임과는 달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관한 측면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업계의 전문성과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그 권한을 위탁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00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타 법령의 예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 등에게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한편, 영 제0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

기관 또는 협회·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실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마련함

제4절 벌칙

Ⅰ. 과태료 (법률안 제39조)

1. 법률(안)의 관련조문

1) 조문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9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5. 제15를 위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약속을 한 자

6. 제24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제8조를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한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2) 조문의 취지 및 배경

◦ 법률안 제39조는 사업자 등이 법률안 전반에서 요구하고 있는 강행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일종으로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대통령령(안)에서 규정할 사항

◦ 법률안 제39조제1항·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3. 대통령령(안) 및 해설

1) 과태료

가) 대통령령(안)

제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00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00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관련 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10]

다) 해설

[별표 00]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00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 해 당 조 항 | 과태료금액 |
|--|--------------|--------|
| 1. 법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1호 | 1000만원 |
| 2. 법 제9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3.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3호 | 500만원 |
| 4.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4호 | 1000만원 |
| 5. 법 제15를 위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약속을 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5호 | 1000만원 |
| 6. 법 제24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6호 | 200만원 |
| 7.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7호 | 1000만원 |
| 8.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2항제1호 | 500만원 |
| 9.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제8조를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한다) | 법 제39조제2항제2호 | 500만원 |
| 10.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2항제3호 | 300만원 |
| 11.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 | | |
|--|--------------|-------|
| 12.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2항제5호 | 30만원 |
| 13.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2항제6호 | 100만원 |

◦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서의 제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과태료산정의 하한선에 맞추도록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안 제정의 취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 위반에 대해서는 상한선 금액으로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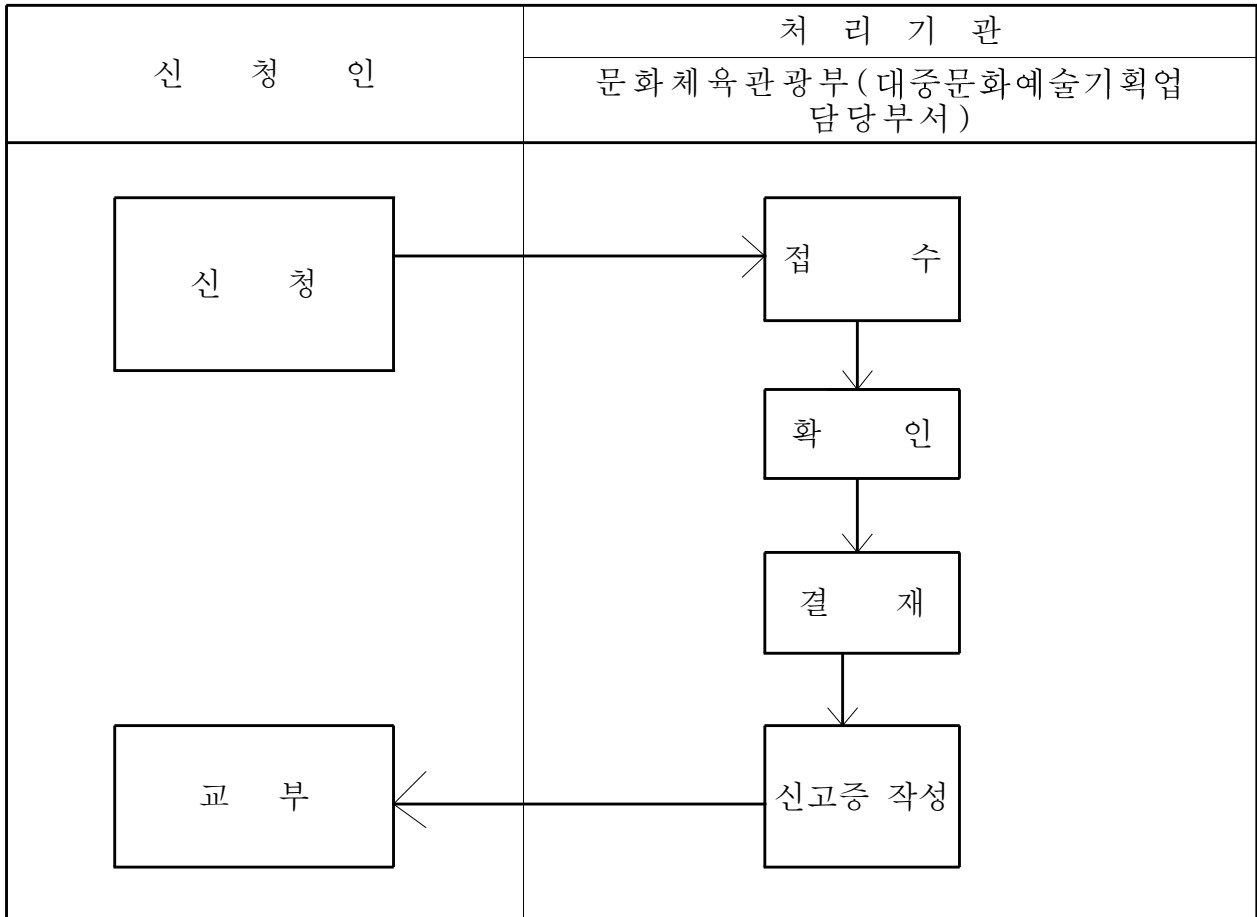
이하 <별지 및 별표>

[별지 제00호서식]

(앞 쪽)

| | | | |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고서 | | | | 처리기간 |
| | | | | 3일 |
| 신청인 | ① 성명 (대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③ 주소 | (전화:) | | |
| ④ 상호 (법인명) | | | | |
| ⑤ 영업소 소재지 | | (전화:) | | |
| ⑥ 기획분야 | | | | |
| <p>「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00조제0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년</p> <p>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 | | |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수수료 |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 ()원 |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제00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신고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제작업자 (☐신고증 ☐변경신고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별지 제00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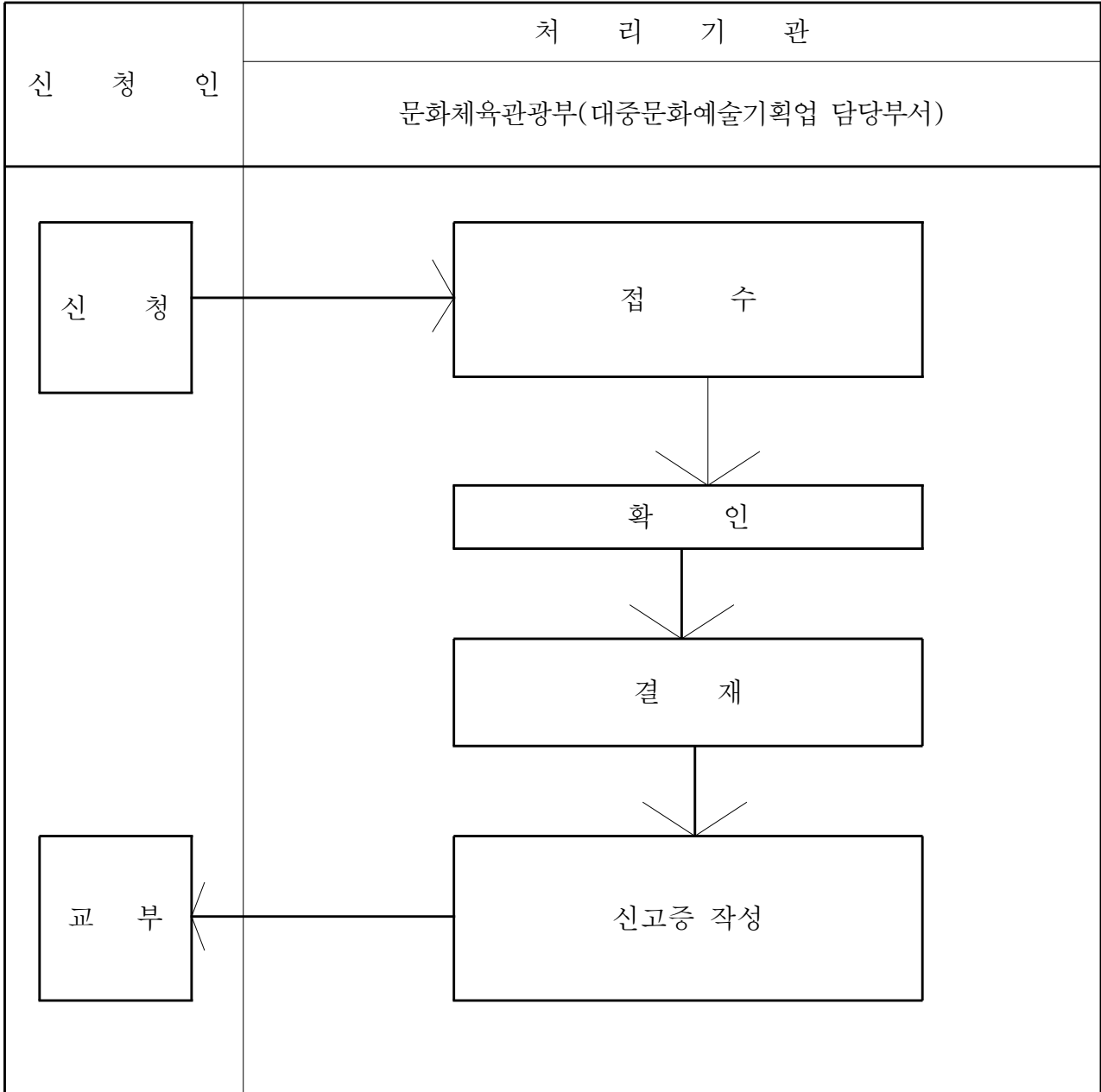
(앞 쪽)

| | | | | |
|--|----------------|-----------|----------------------|-------------|
| 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 | | 처리기간 1 일 |
| 신 청 인 | ① 성 명 (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③ 주 소 | (전 화 :) | | |
| ⑥ 신고번호 (신고일) | | () | | |
| ⑦ 재교부 사유 | | | | |
| <p>「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0조제00항에 따라 대중문화예 술기획업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p> | | | | |
| | | | | 수 수 료 |
| | | | | 없 음 |
| <p><구비서류>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p> <p>※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신청안내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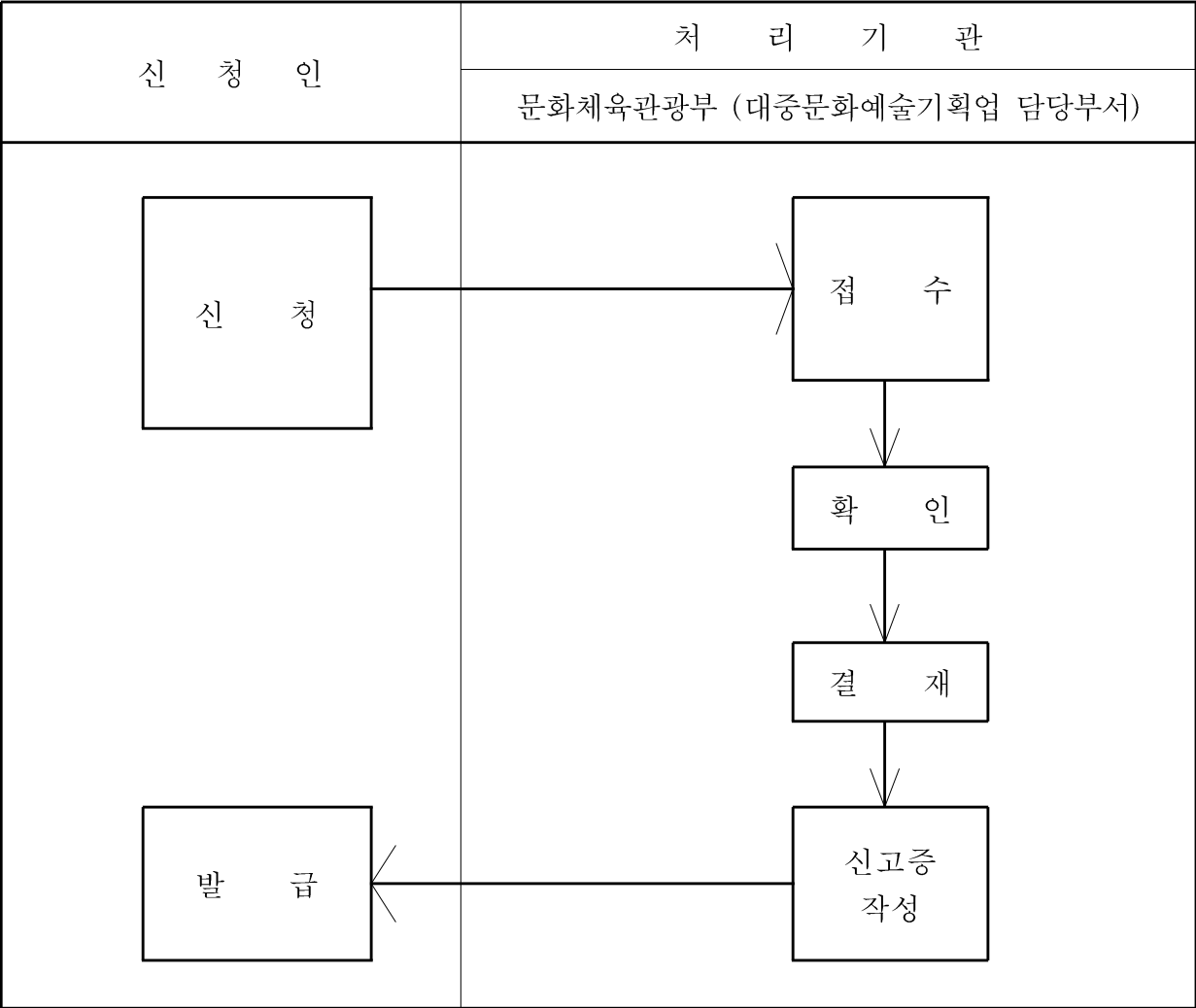


[별지 제00호서식]

(앞 쪽)

| | | | |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 | | 처리기간 3 일 |
| 등 록 인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③ 주 소 | (전화:) | | |
| ④ 신고 번호 | | | | |
| ⑤ 상 호 (법 인 명) | | (전화:) | | |
| ⑥ 변 경 사 항 | | 영업자 (주민등록 번호) | 영업소 소재지 | |
| | 변경 전 | | | |
| | 변경 후 | | | |
| ⑦ 변 경 사 유 | | | | |
| <p>「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 | | | |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 수 료 |
| | 1. 신고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 ()원 |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율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제00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illegible]

(앞 쪽)

- 67 -

[별표 00]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00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 해 당 조 항 | 과태료금액 |
|--|--------------|--------|
| 1. 법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1호 | 1000만원 |
| 2. 법 제9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3.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3호 | 500만원 |
| 4.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4호 | 1000만원 |
| 5. 법 제15를 위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약속을 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5호 | 1000만원 |
| 6. 법 제24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6호 | 200만원 |
| 7.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7호 | 1000만원 |
| 8.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2항제1호 | 500만원 |
| 9.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제8조를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한다) | 법 제39조제2항제2호 | 500만원 |
| 10.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2항제3호 | 300만원 |
| 11.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 12.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2항제5호 | 30만원 |
| 13.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2항제6호 | 100만원 |

[별표 00]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 제0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라.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다.

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 | | | |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영업정지 6개월 | | | |
| 나. 고의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다.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사실을 알면서 고용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라.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4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4월 | 영업정지 6월 |
| 마.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4월 | 영업정지 6월 |

[별지 제00호서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처리기간 |
|--|--------|--------|--|------|
| | | | | 즉시 |
| ① 승계를 하는 사람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 | | |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 | | |
| ③ 영업소 | 명칭(상호) | 변경 전 | 변경 후 | |
| | 소재지 | (전화:) | | |
| ④ 신고번호 | | ⑤ 승계사유 | <input type="checkbox"/> 양도·양수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p>「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 (서명 또는 인)</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 | | | |
| ※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 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수수료 |
| | | | | 없음 |

[별표 00]

수 수 료(시행규칙 제00조 관련)

| 구분 | 금액(원) |
|------|--------|
| 신고 | 50,000 |
| 변경신고 | 20,000 |

제3장 결론(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 하위법령(안))

제1절 법령 3단 비교표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p>제2조(정의)</p> <p>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광고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의 기획·제작·관리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p> <p>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p> <p>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p> <p>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p> | <p>제00조(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p> <p>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2호에 따른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p> <p>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음악산업 중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과 관련된 산업</p> <p>3.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영상물 관련 산업. 다만, 교양·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제외한다.</p> <p>4.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p> | | <p>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p>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p>5.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타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계획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p> <p>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p> <p>10.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말한다.</p> | <p>물과 관련된 산업. 다만, 고전 음악·고전무용·국악·곡예는 제외한다.</p> <p>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와 관련된 산업</p> | | |
| <p>제6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p> <p>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기간·보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p> | <p>제00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의 내용)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보수의 지급시기·방법 및 금액</p> <p>2.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p> | | <p>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6조, 령 26조</p>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p>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 로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제7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p> | <p>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p> <p>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p> <p>4.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 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p> | | |
| <p>제17조(지원센터)</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 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스태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2.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3.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4.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p>제00조(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p> <p>① 법 제17조에 따른 지원센터에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제작 물스태프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실, 교육실, 홍보실 등을 둘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문화예술인의 상담,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관 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불공정거래 및 성폭력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리 및 보급 3. 대중문화예술인의 실태조사에 관 | | <p>저작권법 시행령 제66 조(저작권정보센터 조 직 및 운영 등)</p>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p>5. 업무의 홍보 등 기타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 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한 연구 | | |
| | <p>제00조(지원센터내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원센터장이 위촉한다.</p> <p>③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 |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제18조(실태조사) | 제00조(대중문화예술산업 등의 실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 |

| <p>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p> | <p>시행령(초안) [대통령령]</p> | <p>시행규칙(초안) [부령]</p> | <p>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p> |
|--|---|---|--------------------------------------|
| <p>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조성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u>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 <p>조사)</p> <p>①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또는 지원센터장)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 업종 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의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장이 정한다.</p> | | <p>를 시행령 제7조의2 (실태조사)</p> |
| <p>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u>신고</u>)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 <p>제00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 등)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신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p> | <p>제00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 신청서 등) 시행령 제00조제2항에 따른 신고신청서 및 변경신고신청서는 별지 제00호 및 제00호서식으로 한다.</p> |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p>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u>문화체육관광부령</u>으로 정하는 신고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신청서</p> <p>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p> <p>3. 사업자 등록증 사본</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u>신고증을 발급</u>하여야 한다.</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p>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p> <p>2. 사업자 등록증 사본</p> <p>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p> <p>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p> <p>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p> | | |
| | 제00조 (변경신고의 절차 등)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 <p>① 제0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 | | <p>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8조</p>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 <p>차한 경우에 한한다)</p> <p>5.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p> <p>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p>제00조 (신고증의 발급 등)</p>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00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00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 |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 <p>②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헛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0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p> | | |
| <p>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 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구성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p>제00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내용)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책을 위한 기본 방향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 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통계 조 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00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9</p> | <p>제00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시간 및 지원 등)</p> <p>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은 매년 00 회로 하며, 연 00시간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 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 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 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p> <p>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 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 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 <p>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0조</p> <p>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조</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p> <p>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p> <p>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p>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 <p>조 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인력의 전문성 3.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현황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성 판단 자료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 <p>④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0000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p>제00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영 제00조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0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또는 영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 |
| <u>제31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u> | 제00조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절차)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 | | 게임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22조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p>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p> <p>④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영업의 재개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p> | <p>지 제00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00조 (직권말소 등)</p>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p> | | <p>게임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p> |
| <p>제32조(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p> | <p>제00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p> <p>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p> | |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p>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p>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u>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u></p> <p><u>2.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u></p> <p><u>3. 제27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4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4.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p> <p>5.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p> <p>② <u>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p>기준은 별표 00와 같다.</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00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p> | | <p>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등록취소 등)</p> <p>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
| <p><u>제35조(수수료)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문</u></p> | | <p>제00조 (수수료)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00와 같</p> | <p>광주광역시 체육시설업 등록등에 관한 수</p>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p><u>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p> | | 다. | <p>수료징수 조례, 게임산업진흥법 제4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p> <p>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p> <p>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p>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 | | <p>자</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 | |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 정을 신고하여 등급재 분류 대상인 자 |
| <p><u>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u>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 <p>제00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00조제00항에 따른 000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교육실시업무를 영 제00조에서 정한 전문기관 또는 협회·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 | 게임산업법시행령 제23조 |
| | <p>제00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p>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00조제</p>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 <p>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영 제0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협회·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 | |
| <p>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u>1.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u></p> <p><u>2. 제9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u></p> <p>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해당하는</p> | <p>제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p> <p>① 법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00와 같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00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p> | | <p>게임산업진흥법시행령 제24조</p> |

| <p>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p> | <p>시행령(초안) [대통령령]</p> | <p>시행규칙(초안) [부령]</p> | <p>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p> |
|---|---|----------------------|---------------------------|
| <p>금액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p> <p>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p> <p>5. 제15를 위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약속을 한 자</p> <p>6. 제24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5.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p> <p>6.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6조제2항을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제8조를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한다)</p> <p>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p> <p>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 <p>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p> | |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p>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 | | |
| <p>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营业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p> | | <p>제00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p> |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p>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2012.2.수정안기준) | 시행령(초안) [대통령령] | 시행규칙(초안) [부령] | 비고 (참고조문 및 기타) |
|------------------------------------|----------------|---|-------------------|
| 다. | | <p>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p> <p>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 |

제2절 제언

◦ 지금까지의 검토결과, 대체로 법률안에 따른 후속작업으로서 대통령령과 부령의 규정은 절차적인 내용과 제재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고 있기에 특별히 이론적으로 크게 문제될 만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이중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으로서 몇 가지만 들자면,

- 법률안은 제32조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정지 사유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를 영업정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의 행정적 제재의 기준이 문제된다. 즉, 법률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행정제재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셈이 되는 데 이에 관한 영업정지기간의 해석이 기존 영업정지 기간에 새로운 영업정지 기간을 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기존 영업정지 처분은 소멸되고 새로운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자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고의 고찰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법률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영업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안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기존 법률안(나경원 의원 발의(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수정안에서는 등록제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기존 법률안 제36조)에서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안 제29조에서는 삭제되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이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영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실무에서 갖는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등록제의 경우 등록된 기획업자에게는 반드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교육의 중요성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반면,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특히 교육의 참여 여부를 기획업자의 자율에 맡기는데다 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나 보완책이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로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또한 법률안 제36조에서 권한의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나, 강제사항으로 볼 수 없고, 필요시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법률제정의 초기단계에서 구체적인 권한들을 시행령에서 곧바로 규정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법시행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분야의 산업발달 상황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판단 하에 점진적으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시행령에서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의 최종수정안으로 제시된 내용 중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도 그 규제 내용은 등록제의 규제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법률안의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법률안 제1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고와 신청을 구분하고 있는 행정법의 체계상 단순히 ‘신고서’의 제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입법의 취지가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동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등록제에서와 동일한 규제의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법률안 체계를 고려한다면 수정안 이전의 ‘나경원의원안’의 등록제로 규정된 체계가 입법적 오류가 적다고 판단됨